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매몰비용의 국 비지원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매몰비용의 국 비지원 촉구 결의안

(김병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62
----------	-----

발의연월일 : 2013. 8. 30.
발 의 자 : 김병철·이재병·조영홍·
박승희·이용범·박순남
이강호 의원(찬성자 9인)

1. 주 문

정부는 엄청난 매몰비용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이 뉴타운·재개발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몰비용의 국비지원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뉴타운·재개발 등의 사업 부진으로 인한 엄청난 매몰비용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매몰비용 전액을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매몰비용의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매몰비용 전액을 조속히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정부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2003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2007년에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민들이 직접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선거의 주요공약사항이 되었고, 전국의 도시는 뉴타운·재개발 광풍으로 2,400여개의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었으며, 뉴타운·재개발이 시작되고 10년이 지난 지금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정비사업 등은 담보상태에 빠졌고 주민들은 엄청난 매몰비용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등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작금의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처사에 유감을 표하면서 무리하게 추진된 정비사업 등의 원활한 출구전략으로 매몰비용의 국비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제출한다.

3. 결의안 이송처

가.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4. 첨부

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매몰비용의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매몰비용의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정부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운영되던 주택재정비사업을 2003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2007년에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민들이 직접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선거의 주요공약사항이 되었고, 전국의 도시는 뉴타운·재개발 광풍으로 2,400여개의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었으며, 국민은 정비사업을 투자와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앞다투어 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비사업이 시작되고 10년이 지난 지금 삶의 터전을 빼앗긴 주민들은 분노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공포에 떠는 주민이 수백만이나 되는데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등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이 중단·지연되어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싶어도 엄청난 매몰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건설사의 횡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불안에 떠는 삶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작금의 사태를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에만 미루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의 처사에 유감을 표하면서 무리하게 추진된 정비사업 등의 원활한 출구전략으로 매몰비용의 국비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뉴타운·재개발 등의 사업 부진으로 인한 엄청난 매몰비용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매몰비용 전액을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매몰비용의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매몰비용 전액을 조속히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9월 일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일동